

손발 묶인 군사훈련... 코로나로 막히고 민원접수에 눈치

250만 예비전력 정예화 지지부진
인근 민원에 소음기 부착 사격도
“용병사상·열악한 여건 개선해야”

지난 달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만(중화민국)군이 중국을 막아낼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지 않다”며 대만군의 무기해이와 역량 부족 등을 지적했다.

◆대만군, 제대로 된 훈련 어려워...한국군도 정도의 차이일뿐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대만군은 2011년 27만5000명에서 현재 18만 8000명으로 병력이 줄었다. 매년 8만명을 징병하지만 복무기간도 2년에서 4개월로 크게 줄었다. 220만명이 예비군으로 편성돼 있지만 1~2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훈련으로는 역량 유지가 어렵다. 군의 기강해이와 사기저하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군복무를 마친 20대 대만 남성의 말을 인용해 “4개월의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만군 기강해이와 역량부족등을 지적했다. 사진은 대만 평후현에서 실시된 한광훈련 중 대만 포병대가 해안 상륙부대를 저지하기 위한 실사격 훈련 모습. /뉴스시스

군복무 중 잡초 뽑기 등 부대관리가 대부분이었고 사격술 외 교육훈련도 무의미하다”고 전했다.

한국군도 코로나19 상황 등 여러 악재에 묶여 사실상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비군의 전력저하 우려가 수년간 제기되면서 숙련도가 높은 ‘250만의 예비전력’을 정예화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지만, 예

비전력 예산은 국방비의 0.4%대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다.

물론 한국군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박격포를 비롯해 각종 주특기 교육의 전문교관을 양성해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문교관의 보직이 변경될 경우 후임자 모두가 전문교관 자격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때문에 교육훈련의 수준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외적 훈련환경 조성이 어려운 점도 교육훈련 수준 유지 저하에 기름을 붓고 있다. 최근 육군의 한 부대는 경기도 모처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면서, 장비편제에 포함되지 않는 소음기 부착사격을 실시했다. 해당 부대는 유사 시에 소음기가 보급되지 않음에도, 영점도 맞지 않는 소음기 사격을 해야했다. 이는 사격장 인근의 민원접수 때문이었다.

◆숙련병 육성 가능한 병영환경 구축해야

대만군의 기강해이와 역량부족은 장비체계의 노후화에 무심했던 군수뇌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의 기자 겸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의 비상근 연구원인 김찬우 연구원은 “대만은 1986년을 기점으로 한국군에 비해 장비가 열세인 국가가 되었고, 1990년대 중후반부터 군장비 개선이 정체화됐다”면서 “이는 중국의 압력이 있었지만, 대만 군수뇌부가 현대화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한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김연구원은 대만군이 한국군에 비해 나은 점으로 두가지를 정리했다. 첫번째는 보병 단위로 지급되는 개인 장구류에 대한 연구가 앞서 있다는 점, 두번째는 반모병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병의 진급체계를 한국군처럼 복무기간 단축이 진급 기간 단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만군은 2019년부터 의무복무기간이 4개월로 단축되어 의무복무 대상자는 기초 군사훈련 2개월과 특기 교육 2개월이 끝나면 이등병으로 전역한다. 대만의 모병제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숙련병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부사관 임관 코스로 나아가는 제도이고, 부사관 임관과 군 잔류를 원하는 이들은 상등병으로 진급하게 되는 체계다.

김연구원은 무엇보다 대만군과 한국군이 정병강군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공통의 문제점으로 군수뇌부의 비상식적인 용병사상과 함께 열악한 복무조건을 들었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안경덕 “이달말 외국인 노동자 입국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일상회복 맞춰 농어촌 인력난 해소 “허용국 확대... 인원제한 폐지 추진”

이달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맞춰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경기도 안산의 금속제조업체 중일을 찾아 “코로나19 이후 엄격히 제한했던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늦어도 11월 말부터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그동안 인력난을 호소해 온 중소기업체와 농어촌에서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해 외국인 노동자 입국 허용국을 늘리고, 인원 제한도 폐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시스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해 왔다.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총 16개국에서 노동자들 입국이 허용됐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입국이 제한됐다.

예컨대, 필리핀과 파키스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경우 방역 위험이 큰 국가로 지정해 비자 발

급을 허가하지 않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조치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인원은 매년 5만명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 6000~7000명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현재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등 6개 국가에 한해 신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 또한 1일 100명 및 1주 600명 한도로 입국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나머지 국가들의 외국인 노동자도 입국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현지 예방접종, PCR 음성 확인 등 방역조치 하에 전 송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일·주별 도입 상한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해당 사업장에도 조만간 입국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의 예방접종 및 사업장 방역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농식품 혁신 사례, 직접 뽑아주세요”

농식품부 ‘농식품 정책콘서트’ 개최

농업인을 비롯해 일반국민과 전문가 등이 올해 농식품 분야 혁신 사례를 직접 선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실에서 ‘2021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 참여형 행사로 열리는 이번 정책콘서트는 국민이 제창하는 정책개선 사례를 농업인과 국민이 직접 선정하고, 현장이 바라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 공론의 장이다.

행사에서는 올해 농식품부가 추진한 혁신정책 중 최종 선정된 6건의 사례가 발표되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다. 발표 사례는 내부 공모를 통해 접수된 108건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가축분뇨, 똥이 아닌 돈으로 만들어요 ▲돼지고기 ‘월산지판별 키트’ 개발 ▲귀농 귀촌,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세요 ▲

취약계층의 영양부족, 먹거리 바꾸쳐로 해결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도매시장을 온라인에서 만나다 등 6가지로 추려졌다. 현장 참가자와 온라인 참여자 등 300여 명이 정책의 평가자가 되며 사례별 추진과정, 성과 등을 고려해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투표점수는 사전평가와 합산해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2점이 최종 결정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빠르고 편리해진다

부동산원 등 인증기관 8개 신규 지정

건물부문 탄소 중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이 지금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점차 증가하는 ZEB 인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ZEB 인증기관 8개를 신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인증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이다.

ZEB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

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녹색건축물로, 2017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인증제도가 도입됐다.

ZEB 인증 건수는 제도도입 첫해인 2017년 10건에서 매년 증가 추세며, 2020년 공공부문 의무화(1000제곱미터 이상 신축)를 시작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는 1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ZEB 인증기관 확대를 통해 인증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증기관 한 곳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과 ZEB 인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돼 인증 신청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환경부 탄소중립 그린페스티벌 개최

온실가스 순배출량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와 온라인 쇼핑몰이 손 잡고 녹색제품 판매에 나선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15일까지 ‘2021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탄소중립 그린페스티벌’을 친환경대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네이버·인터파크·홈플러스·우체국쇼핑·더현대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친환경대전에 참가한 기업들의 제품을 선보인다.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생방송도 진행한다. /세종=원승일 기자

산업부 ‘청정수소 공급망 이니셔티브’ 설명회

“청정 수소교역 사전 준비 중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와 공동으로 1일(현지시간) ‘청정수소 공급망 이니셔티브(Clean Hydrogen Trade Initiative)’ 추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정수소 공급망 이니셔티브’는 향후 탄소중립 시대에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국제 청정수소 공급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청정수소 공급국 및 수요국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회를 지향하고 있다. 이번 이니셔티브에서는 수소 수요·공급 등 교역 관련 프로젝트가 구체화된 국가를 중심으로 ‘청정수소 인증’, ‘월산지 규정 등 교역규칙’,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수소가격

공시’, ‘실증 프로젝트’ 등을 논의했다.

설명회에서 산업부양기육FTA정책관은 “수소는 청정에너지의 저장과 운송이 가능한 미래 에너지로서 탄소중립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요소이며, 청정수소 교역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글로벌 의제가 될 것”이라며 “수소수요국과 생산국이 함께 모이는 다자간 논의를 통해 청정 수소 교역의 사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 등 국내 기업들도 해외청정수소 도입 관련 프로젝트 추진현황과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0월7일 한국 주도의 ‘국제 수소이니셔티브 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 일환으로 ‘청정수소 공급망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이다. /세종=한용수 기자